제213호(2022. 12. 29.)
KREI 농정포커스

2023년 10대 농정이슈

국승용 외

요 약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하여 2023년에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10대 농정이슈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영농안정 대책 마련
-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과 달성 전략 수립
- 다각적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한 직불제 확대·개편 추진
-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른 농촌 정책의 혁신
- IPEF 참여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마련
- 농산물 유통디지털화 진전
-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공급 확대
- 취약계층 식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 스마트농업 인프라 강화
- 2030 NDC 감축 로드맵 이행 조치 및 기후변화 적응 강화

01

2023년 농정 여건[1)]

1.1. 세계 및 국내경제 전망

2023년 세계경제 전망[2)]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2년(3.1%)에 비해 0.7%p 낮은 2.4%로 전망

- 높은 인플레이션, 긴축 재정, 금리 급상승, 민간 부채 부담의 실물 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세계 경제의 경기회복이 지연
- 2023년 미국,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미국은 0.6%, 유로지역은 0.0%, 영국은 -0.2%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일본은 1.5%의 낮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신흥국들 또한 대외 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2022년 5월 전망 대비 전망 성장률이 낮아짐. 2023년에 중국은 4.8%, 인도는 5.6%, 러시아는 -2.5%, 브라질은 0.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미 연준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때까지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것을 시사

- 2022년 12월 최종 금리는 4.50%~4.75%로 결정될 것으로 보임. 2023년에도 고물가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2023년 상반기에 5%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통화 긴축,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불확실성 확대로 인하여 2023년 상반기에 당분간 강달러 기조가 전망됨.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정, 미국의 통화 긴축으로 인한 수요 축소, 에너지 위기 완화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시점에서 강달러와 주요국 환율 약세는 진정될 것으로 보임.

IMF는 2023년 상품과 서비스를 종합한 세계 교역량이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는 2000년 이후 평균적인 교역량 증가세인 4.6%보다 낮아, 국제 교역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2023년 연평균 유가(WTI 기준)는 2022년 대비 소폭 하락한 91.6달러로 전망

- 2022년 상반기 국제유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급 불안 우려로 120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하반기에는 80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여 2022년 평균은 97.78달러임.

1) 국승용 선임연구위원, 김재현 연구원
2) 안성배 외. (2022. 11. 10.). "2023년 세계경제 전망".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Vol. 22, No. 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요약

- 고유가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 경제회복의 지연으로 인하여 원유 수요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OPEC+의 감산 등으로 공급 불확실성이 심화될 전망임.

2023년 국제 곡물 가격은 2022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곡물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가뭄 등으로 급등하였으나,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서 주요 곡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임.
- 2023년에는 지정학적 위험, 식량 보호주의, 미국·아르헨티나의 건조 기후,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작황 악화 등 수급여건 악화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미 농무부에서는 2022/2023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87%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공급량(소비량+기말재고량)은 1.6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소비량은 1.09%, 교역량은 4.19% 감소, 기말재고량은 3.6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023년 국내경제 전망[3)]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8%로 전망

- 수출 증가세 둔화와 투자 부진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대외적 요인으로 미국 금리인상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이 지속된다면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대내적 요인으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등이 있을 수 있음.
-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여파에서 회복됨에 따라 서비스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고물가로 인해 실질적인 구매력이 저하되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재화소비가 둔화되어 3.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0.7%의 낮은 증가율이 예상되며, 건설투자 또한 주택시장 부진과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인해 0.2% 수준의 낮은 성장률이 전망됨.
- 국가 간 이동 증가의 영향으로 서비스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계 경제의 둔화로 상품 수출 부진이 예상되어, 수출 증가율은 1.6% 수준으로 전망됨. 2023년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어 경상수지는 2022년 230억 달러 흑자에 비해 축소된 1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의 안정 등의 영향으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폭은 축소될 것이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상회하는 3.2%의 높은 수준으로 예상됨.
- 2022년의 양호한 고용 여건이 2023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저효과와 고령화로 인하여 취업자 수 증가는 2022년 79만 명에 비해 크게 축소된 8만 명 수준으로 전망됨.
- 2022년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두 차례 대규모 추경의 영향으로 재정지출은 2021년 대비 11.0% 증가한 630.5조 원으로 예상됨. 2023년 국내 재정지출은 코로나19에 의한 피해 회복에 따른 재정 지출 감소,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대비 1.9% 감소한 618.3조 원으로 전망됨.

3) 정규철 외. (2022. 11. 10.). "KDI 경제전망 2022 하반기". Vol.39. No.2.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1.2.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

국제 곡물·국제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환율, 금리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 증가

- 국제곡물과 국제원유 가격은 2022년과 같은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축산·시설원예를 비롯한 농업생산 전 부문의 경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신규 투자 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시중금리에 연동된 변동금리 정책자금의 이자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농산물 판매가격은 생산비를 고려해 농가가 결정할 수 없고 경매 등을 통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생산비 증가를 판매가격 상승으로 전이시키기 어려움. 농가의 구입가격은 상승하고 농가의 판매가격은 상승하지 못하여 농가 교역조건 악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큼.
-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장기 투자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기존의 영농을 유지할 수 있는 단기적인 금융지원의 필요성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식품 물가 상승과 저소득층 식품 접근성 악화

- 국제곡물 가격과 환율 상승 등으로 식품의 원료 가격이 상승하여 식품 제조업계에서는 가공식품 가격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외식 부문의 가격 또한 인상되어,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시기에 비해 큰 폭으로 식품물가가 상승함.
- 경기 위축으로 가구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금리 인상 등으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할 수 있어 식품 소비가 위축될 수 있음.
- 소득이 정체되고 식품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식품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화됨.

인구 감소, 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에 의한 농촌 위기 지속

- 2021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2.32명)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신생아 수 감소와 총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사회전반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농촌의 청년층이 도시와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어 농촌 인구의 고령화는 도시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농촌 인구 과소화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등도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 중의 하나임.
-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과소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이며,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윤석열 정부 농정의 본격적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농정 지표로 설정
- 튼튼하고 굳건한 식량주권, 혁신하고 성장하는 역동적 농업, 두텁고 안정적인 농가경영 안전망,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 먹거리,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등을 농정목표로 설정
- 농식품부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삶의질향상위원회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농정 추진체계 전반의 혁신이 이루어짐.
- 농업·농촌·식품산업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투입 계획이 수립되는 등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다양한 농정이 추진될 예정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신규 입법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부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회의 입법 절차를 통과하면 농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됨.
- '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이 추진 중이며, 농촌 공동체 재건에 필요한 지원, 이를 위한 인력 육성 등 농촌지역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논의되고 있음.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10개월로 연장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조기 확대
- 기업간 거래 등 대량의 농산물을 거래하는 디지털 농산물 거래소의 설립·운영과 관련 법령 재개정 예정

다양한 중장기 농정 전략 과제 추진

-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 신규 육성' 정책 추진
- 간척지 등 유휴부지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시설원예·축사 스마트팜 확대
- 푸드테크 원천기술 확보, 거대 신생 기업 육성 등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 추진
- 스마트 APC 확대, 온라인 거래소 출범, 오프라인 도매시장 효율화 등 농산물 유통 선진화 방안 추진
-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해외농업 자원개발, 종자산업 육성, 재해보험 발전,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로드맵 등 다양한 중장기 전략 과제 추진 예정

02

10대 농정이슈

2.1.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영농안정 대책 마련[4)]

농가 판매가격 하락, 농가 구입가격 상승, 농업 경영 부담 증가

농가 판매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농가 구입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1년 1분기부터 '22년 3분기까지 분기 평균 0.8% 하락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농가구입가격지수는 분기 평균 2.8% 증가하여, 농가교역지수는 3.5% 악화됨.
- 농약비, 비료비 등이 매우 높았던 2022년의 기저효과로 2023년 농가 구입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하나 평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농가 채산성은 좋지 않은 여건을 유지할 전망임.
- 농산물의 가격은 공판장, 도매시장 등에서 상인들이 참여하는 경매에 의해 형성되는 비율이 커 생산비 인상분이 판매가격으로 전이되기 어려운 구조임. 품목에 따라 생산비는 증가하였으나 판매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2023년 농가 교역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국제 곡물 재고율이 하락하여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국제 원유 가격 하락 폭이 크지 않아 현 수준의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환율과 금리도 당분간 상승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일부 농가 구입가격은 2023년에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소득이나 고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농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농가판매가격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 어려워 농가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농가 경영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농업소득 감소는 재배면적의 감소로 이어지고, 생산 기반 약화와 자급률 하락을 야기할 수 있음.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한 수요·공급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저리 정책자금 지원 확대, 상환 연기, 농자재 구입가격 관리 등 영농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국제 곡물의 수급 및 가격 상승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자재 비축 시스템 재정비, 원자재 구입 자금 지원 및 요소 할당관세 등을 통해 대외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마련
- 농업 투입재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농협 등과 생산자단체, 농자재 기업 간 협력체계 강화

4) 서동주 전문위원, 이형용 전문위원

2.2.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과 달성 전략 수립[5)]

국산 주요 곡물 가격안정 필요성 증대

- 쌀은 2021년산이 역대 가장 큰 가격하락(단경기 가격이 수확기 대비 20.5% 하락)을 기록하였고, 2022년산도 가격안정을 위해 45만 톤 규모의 격리를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가 지속됨.
- 쌀 가격의 대폭 하락 및 정부의 적시적 정책 대응력 제고 등을 배경으로 국회에서는 쌀 초과공급 기준 충족 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쌀 과잉규모 확대 우려 등으로 찬·반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콩 가격은 평년 대비로는 높으나, 생산량 증가 등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8% 이상 하락함.

새정부는 2027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5%로 결정

- 정부는 식량안보 강화의 일환으로 하락 추세인 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2027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평년('17~'21년) 대비 5.9%p 높인 55.5%로 설정함('22. 12. 22.)
- 품목별로는 쌀은 자급기반을 유지하되 소비량 감소를 고려한 적정 생산을 추진하여 98%,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제곡물 수급 불안 시 국내 영향이 큰 밀, 콩은 각각 8%, 43.5%로 큰 폭의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설정함.
- 한편, 2021년 기준 쌀 자급률은 2020년산 작황 악화로 인해 84.6%로 일시적으로 하락(직전 5개년 평균은 98% 내외)하였고, 콩 자급률은 2010년대 들어 30% 중반대까지 상승했던 것이 2021년에는 작황 악화로 23.7%까지 하락하였음. 밀 자급률도 1.1%에 그쳤는데 평년 기준으로도 1.0%로 자급률이 매우 저조함.

곡물 수급 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 필요

- 2021년산 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산지유통업체의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되어, 쌀산업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는 쌀 가격 안정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전염병 발생 및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수급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가격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주요 곡물 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의 자급률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쌀 적정 생산과 쌀을 제외한 식량작물 재배 촉진을 위해 추진되었던 과거 유사 정책(논소득기반 다양화·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장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사업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농가 참여도가 떨어졌던 측면이 있음.
- 정부는 쌀 수급 균형 및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증진을 목적으로 밀·콩·가루쌀 재배 시 소득을 보전하는 보조금을 중장기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2023년부터 도입할 계획임.
- 기존의 타작물 전환 정책이 주로 쌀 공급과잉 해소를 목적으로 단기적인 지원에 그쳐 정책효과가 반감되었던 한계점을 노출했으므로, 신설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실질적인 정책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 정책을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음.

5) 김종인 연구위원

2.3. 다각적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한 직불제 확대·개편 추진[6)]

식량안보 강화,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적 수요 부응 차원에서 직불제 확대·개편 필요

식량안보의 중요성 다시 대두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가격 변동성 확대(가격), 기후 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정(물량),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불안정(물류) 등에 따라 식량안보 강화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음. 2021년 9월 발표된 국가식량계획에서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확대, 먹거리 접근성 보장 등을 강조하였음.

농업 부문 지속가능성 확보 및 사회적 수요 부응 필요

- 농업 부문 경제적 지속가능성(농가 소득 증대 및 안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농업 인력 세대교체, 농촌다움 복원), 환경적 지속가능성(농업 환경부하 경감, 탄소중립 기여) 강화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대한 사회 수요에 부응하여야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2. 3. 25. 시행)',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심사 중)' 등과 관련됨.

최근 입법 및 국정과제 반영 필요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117567, 공포)에서는 직접지불금 지급 농지 조건(일명 17/19 조건)[7)]을 완화하였음.
- 120대 국정과제 중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청년농업인 육성, 환경친화적 농업),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식량주권 확보, 농업직불금 확보) 등은 직불제를 개편하여 달성할 수 있음.
-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2022. 10.)에서 기본직불제 사각지대 해소(17/19조건 폐지),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및 경영이양직불제 개편 검토, 친환경·경관직불제 확대 및 탄소중립 직불제 도입, 전략작물직불제 도입(2023년) 등을 제시하였음.

직불제 확대·개편 청사진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여 농정 목표 달성에 실질적 기여

- 위와 같은 법령 및 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기존 직불제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확대·개편·신설할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다양한 농정 목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기본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는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안전망을 강화하여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하도록 함.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및 경영이양직불제 개편을 연계하여 농업 인력 세대교체를 촉진하는 한편, 경관직불제를 확대하여 농촌 공간 재생(사회적 지속가능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함. 이때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등을 넓은 의미의 '직불성 사업'으로 전환할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유찬희 연구위원, 김태훈 선임연구위원
7)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요건으로 2017~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

- 탄소중립 직불제 신설과 친환경 직불제 확대는 농업환경 부하 경감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 부문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함.
- 2023년 도입 예정인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안보 강화에 이바지하면서 동시에 구조적인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별 직불제의 효과가 상충되지 않도록 제도를 면밀히 설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생산성 향상은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환경부하 경감이나 탄소중립 달성 측면에서는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직불제 중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직불제, 동시에 받을 수 없는 직불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해야 함.
- 이와 함께 직불제 예산을 점진적으로 5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국정 계획에 맞추어 연차별·부문별 예산 규모를 책정하여, 각각의 직불제가 유기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책화를 위한 기반 구축 시급

- (예산) 연차별·부문별 사업량 및 예산을 책정할 때는 우선순위(시급성과 중요도, 공감대 형성)와 난이도(활동의 난이도, 정책 대상 참여도)를 고려해야 함. 예를 들어 탄소중립 직불제 등은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우선순위 높음) 영농 방식을 전환해야 하고 성과가 발현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므로(난이도 높음) 시범사업 등을 충분히 거친 뒤 본사업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반면 전략작물직불제와 경관보전직불제는 기존 경험을 살려 우선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추진 체계) 선택 직불제는 지역 특성을 살리고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보충성의 원리).[8]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재량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지역 참여자(농업인)가 중심이 되는 지역협의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실천하도록 하되, 직불제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법령) 기본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는 법령에서 개정하였고, 이에 더해 친환경·경관직불제 확대, 탄소중립 직불제 도입, 경영이양직불제 및 영농정착지원금 제도 등과 관련된 근거 법령 개정을 적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8) 소규모 사회 조직에서 먼저 기능을 수행하고, 이 단위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상위 단위에서 이를 보조하도록 하는 원칙임.

2.4.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른 농촌 정책의 혁신[9)]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에 따라 先계획·後사업 체계 확립

-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 지원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이 제정됨.
-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는 농촌 공간의 미래상과 기본전략(기본방침)을 제시함. 시군은 농촌 공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농촌공간기본계획(10년 단위)와 공간정비·일자리 창출·정주여건 개선·공공서비스 확충 등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 재생 계획을 담은 농촌공간시행계획(5년 단위)을 수립함.
-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 재생에 필요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시행함. 이때 중앙정부와 시군은 협력을 통해 농촌재생 프로젝트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함.
- 농촌공간계획 속에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농촌 주민 거주지 보호, 산업시설의 이전·집적화 유도 및 농촌 경관과 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함. 이때 주민의 지구 지정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자치 규약 마련·이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협정을 체결토록 함.

농촌 재생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농촌공간 정책의 종합적·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농촌공간 관련 계획 및 주요 시책 등의 심의기구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정책위원회, 시도는 광역정책위원회, 시군은 기초정책위원회를 설치함.
- 농촌공간계획의 수립,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 추진 및 관계 기관·부서 간 협의 등을 총괄·관리할 기구로 전담조직을 설치함. 농식품부는 기본방침을 작성하고 농촌협약 시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재생기획단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시군은 농촌공간 지표 조사 및 농촌재생 사업의 관리, 주민협정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촘촘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정책의 지원기관으로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농식품부는 중앙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시책발굴, 전문인력 양성,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등에 관해 지원함. 시도와 시군은 자료조사, 지역협의체 운영, 현장 전문가 육성, 농촌공간계획 수립, 농촌재생 프로젝트 지원, 주민협정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농촌재생 프로젝트 정책 분야에 맞추어 중앙의 농촌 정책 조직 및 예산 구조 변화

- 성공적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농식품부)의 조직을 개편함.
- 균형잡힌 농촌재생을 위해 농촌협약에 포함될 수 있는 정책 분야 및 대상 사업을 확대·개편 예정
- 향후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한 농촌재생 프로젝트 분야에 맞추어 프로그램, 단위 사업 및 세부사업 간 위계를 재설정하고, 사업명칭도 사업 구조에 맞추어 변경할 필요가 있음.

9) 심재헌 연구위원, 한이철 부연구위원

2.5. IPEF 참여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마련[10)]

IPEF, 2022년 5월 공식출범에 이어 9월 4개 분야별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 선언[11)]

- IPEF 참여국들은 ① (무역) 디지털전환, 식량안보·기후변화, 노동·환경, 무역원활화, 투명성 등의 무역규범과 국제협력 및 지원, ② (공급망)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인·태지역 협력체계 구축, ③ (청정경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역내 협력방안 모색, ④ (공정경쟁) 공정경제 환경구축을 위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4개 분야의 각료선언문을 채택
- 각료선언문은 협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이며 향후 실무 협상을 통해서 분야별 협상의 기본골격과 세부원칙이 마련될 예정임. 미국은 2024년 대선 이전 실질적인 성과도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2022년 12월 호주에서의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할 전망임.
- 농업부문은 주로 무역과 관련되어 있으며, 참여국들은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및 투자를 강화하기로 함. 또한 농식품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수출입 제한조치 규범을 강화하기로 함.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대신 통관절차의 투명성·동식물검역(SPS)·기술무역장벽(TBT)·디지털 전환 등 비관세장벽의 통상규범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전통적 다자통상체제·지역무역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경제·통상협력체제로 부상 중인 IPEF

글로벌 과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및 지원과 새로운 통상규범 강화가 중첩되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부문에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공존. 기회는 최대화 위협은 최소화하는 대응 전략 필요

- 식량안보·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강화는 우리나라 농정기조에 맞춰 적극 추진하는 과제임. 참여국들의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농업부문 국제협력 및 지원 강화를 발판으로 우리나라의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함.
- IPEF는 비관세장벽 완화라는 통상규범 강화를 통해 기존 RCEP, CPTPP, USMCA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목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큼. 특히, 미국 주도로 관세 이외에 새로운 형태의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가운데 미국의 비관세철폐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여 협상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IPEF는 관세 철폐 이외의 수출입규제조치, 기술무역장벽, 동식물 검역 등 농업부문 전반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철폐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규제철폐를 위한 회원국 간 협력과 국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민감 부문을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농업계·연구계·학계·정부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협상 추진

- WTO 다자통상체제 출범, 동시다발적 FTA 추진 등의 정책이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농업계의 갈등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농업분야 협상 추진 시 소통 강화 등 대내 협상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
- 주요 선진국의 대내 통상협상 추진 경험 및 절차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대내협상을 통해 농업계와 정부 간 갈등 및 불신을 완화하여 윈-윈 하는 통상정책 수립

10) 김상현 연구위원, 정대희 전문연구원

11) IPEF(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세계 인구의 32%, 세계 GDP의 41%를 차지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태지역 경제·통상협력 체제임.

2.6.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 진전[12)]

농산물 온라인 비대면 거래 수요 증가에 따른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 정책 추진

- 3년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비자들의 비대면 구매 증가 및 농산물 거래에서 온라인화가 급속히 진행
- 디지털 범용기술의 유통산업 적용 확대 및 농산물 유통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한 유통주체 간 네트워크로 농산물 유통 전반의 운영 방식과 서비스에서 혁신 필요

스마트물류 기술 기반의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확대 및 거점 물류 시설 건립

- 현재 산지 거점 APC는 20여 개로 70% 이상이 남부지방에 자리 잡고 있어, 주요 납품처와의 거리 문제로 인한 물류비용 가중 및 이용도 저하 등의 비효율 발생
- 종합적인 산지 APC 역할 개편 및 수도권 분산 거점 APC 확충, 스마트 ICT 기술 기반의 스마트 APC 확대 등 효율적인 APC 정착 및 운영 방안 마련 필요

공공형 B2B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구축 및 도매거래 디지털화 추진

- 농산물 온라인 B2C 거래의 비약적인 증가 대비, 농산물 유통의 주축인 B2B 거래의 온라인화는 극히 부분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실정
- 공공형 B2B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구축 및 온라인 도매거래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생산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 도매거래 주체 모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자유롭게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한 거래 환경 조성 필요
-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사고팔 수 있는 경쟁 관계 조성을 통해 농가 수취가격 및 농산물 유통 효율성 제고
- 투명하고 신속한 대금 정산방식 도입, 거래된 농산물의 편리한 분산을 돕는 B2b 거래소 병행 설립, 물류 부담 감소를 위한 공동물류체계 구축 등 다방면적인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농산물 온라인 B2B 거래 정착

농산물 유통 데이터 표준화 및 물류 정보화 시스템 구축

- 농산물은 생산과 소비 사이의 시간, 장소 불일치로 인한 비효율이 커, 생산 및 유통·소비 정보의 집적을 통한 효과적인 물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통합정보체계 필요
- 농산물 스마트물류 기술 도입 및 정보화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농산물의 상품 표준화 및 물류 표준화 필요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시스템 구축 병행 추진을 통한 디지털화 진전

- 거점 스마트 APC 확충, 스마트물류 설비 도입, 표준화·규격화를 위한 선별기·포장재 지원 등 유통 디지털화의 기반 인프라에 대한 확대 투자 필요
- 온라인 B2B 도매거래 플랫폼 정착, 물류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유통 데이터 표준화, 온라인 B2B 거래 관련 법 제·개정 등 관련 제도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디지털화 추진

12) 김성우 연구위원, 김동휘 연구원

2.7.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공급 확대[13)]

농업 생산에서 기본 투입 요소인 노동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고령 농업경영주 비율 확대. 청년 농업경영주 비율은 급격히 감소. 이 추세는 향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농업 생산을 위한 노동력 투입에 적신호

- 농업경영주 중 65세 이상인 고령 농업경영주 비율은 2000년 32.7%에서 2010년 46.4%, 2020년 56.0%로 증가함.
- 이에 반해,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경영주 비율은 2000년 6.6%에서 2010년 2.8%, 2020년 1.2%로 급감함.
-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미래 농업 생산 지속 및 혁신 역량을 갖춘 농업경영주 육성에 적신호가 켜짐.

임금근로자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적기 영농의 어려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노무비 증가로 농가의 경영위험 초래

- 임금근로자 부족으로 적기 영농이 어려운 작물 재배 농가 비율은 64.8%, 축산업 농가 비율은 65.2%임(엄진영 외, 2020).
- 농가구입가격지수(2015년=100)에서 노무비는 2010년 74.0에서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8년 114.8,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2020년 124.2, 2021년 135.3으로 급격히 상승함.
- 임금근로자 공급 부족으로 인해 파생되는 생산 차질,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압박은 농가 경영에 위험 요소가 되고 있음.

청년 농업경영주 양적 확대와 청년 농업경영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 방식 개선·강화

- 현행 영농정착지원사업 정책 대상자를 확대하여 청년 농업경영주 양적 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함.
- 유입된 청년 농업경영주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 진입 이전단계-영농 진입 단계-운영 단계-성장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지원 정책을 강화함. 특히, 영농 진입 이전단계와 성장단계의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농 진입 이전단계에서 농업 일자리 체험·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영농 관련 기초 교육을 이 기간에 충분히 이수하도록 함.[14)] 영농 관련 기초 교육은 경영체를 창업하기 이전 충분히 습득하도록 함. 농업 일자리 체험·실습 기회는 선발된 선도 농가, 농업법인 등에서 제공하고, (예비) 청년 농업인은 해당 농가 및 법인에서 월급을 받고, 정부는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과 매칭하여 해당 사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 충분한 교육 및 기술 습득 이후, 경영체 창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경영체 성장단계에서는 소득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영역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함. 구체적으로 품목, 배경, 역량이 다른 청년 농업인이 융복합 창업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류를 통해 새로운 틈새시장 개척과 새로운 영역에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함. 이후, 이러한 공동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함.

13) 엄진영 연구위원
14) 현재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의무사항으로 필수 40시간, 선택 9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품목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편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 외국인 근로자의 연중고용이 필요한 고용허가제는 인력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작물재배업 인력수요 형태와 부합하지 않음. 연중고용이 가능한 농업 품목은 축산, 일부 시설원예 작물임. 이들 이외의 작물 재배 품목은 계절적 노동 수요가 발생함.
- 연중고용이 필요한 품목은 현행 고용허가제로 대응하고, 계절적 노동수요가 필요한 품목은 계절근로자제로 대응함. 다만, 이 경우 계절근로자의 취업·체류 기간을 현행 3개월, 5개월에서 3~9개월까지 유연하게 대응하고, 농가 또는 지자체가 품목의 인력 수요에 맞게 3~9개월 중에서 선택하도록 함.
- 3개월 미만의 근로자 고용이 필요한 농가는 2022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공공형 계절 근로 시범사업을 평가한 후,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개선된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함.
-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농가의 인력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가 필요함.

농업 고용인력 정책 계획 수립과 중장기 인력 계획 수립

- 농업 임금근로자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력 지원 법률을 제정하여, 인력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인력 계획 내에서 내·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
- 농업인력 지원 법률에는 중앙정부 단계에서는 농업고용인력 육성지원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 및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전체 농업의 내·외국인 근로자 필요 규모 전망 및 공급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함.
- 시도단위에서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시도의 농업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함. 시도 단위의 종합계획에는 시도 내 시군의 농업인력 규모 파악과 시군 간 인력 연계 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 시군단위에서는 지역 내의 내국인력과 외국인력 실태를 조사함. 실태조사에는 품목별·시기별 인력 규모와 인력 부족 규모를 파악함. 또한, 각 시군 내의 농업 일자리 알선·중개 역할을 하는 센터[15]간 인력 연계 계획을 수립함.
- 더불어 정부는 중장기 농업 인력 계획을 수립함. 중장기 농업 인력 계획에는 청년, 중년 농업경영주 육성 계획과 이에 따른 임금근로자 필요 규모 추산, 내·외국인력 계획을 수립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농촌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및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특화형 비자 및 농업이민제도 등을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함.

15) 대표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형 농업 일자리 알선·소개기관인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가 있음.

2.8. 취약계층 식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16)]

취약계층 식생활을 위협하는 경제적 요인들은 2023년에도 지속될 전망. 취약계층 식생활은 적신호

- 취약계층의 경우 가구소득이 낮아 식품비 지출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음. 소득감소나 식품비 상승 등은 취약계층에게는 영양공급 및 건강의 문제를 넘어 삶의 질 전반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음.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는 의료비용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관심이 요구됨.[17)]
- 2022년부터 지속되어 오던 高물가, 高이자율, 高환율(이른바 3高)의 문제는 2023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경제성장률 전망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高이자율과 高환율은 명목소득의 저하로, 高물가는 실질소득의 저하로 이어져 취약계층의 식생활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먹거리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시급

- 취약계층 대상 식생활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현금지원 방식으로 운영 중임(생계급여 중 약 35%가 식품비로 설계). 현금으로 지급된 식품비는 타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커 식생활 개선에는 한계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물지원사업인 정부양곡할인 및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연간 약 830억 원 수준(2020년 기준)으로 그 규모 및 식생활 보장 정도에 있어 한계가 있음.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 취약계층 식생활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3대 먹거리 지원 시범사업군(농식품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본사업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며, 2022년 10월 현재 예비타당성 대상과제로 선정된 단계에 있음.
- 세계 경제 10대 대국으로서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The Right to Food)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적 책무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정부는 대규모 현물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성실히 시급히 감당해야 할 것임. 농식품부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며, 국가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는 기획재정부에서도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우선권을 두어야 할 것임.

취약계층 대상 식생활 지원제도는 수혜자 지향적 방향으로 설계되는 등 지속적인 발전 방향 모색 필요

-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제도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통합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요구되는 동시에 다양한 집단의 취약계층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창의적 노력 또한 지속될 필요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경우, ① 건강 식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 확대 설계, ②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access to foods)을 고려한 사용가능 매장 확대 및 온라인몰/꾸러미배송 활성화, ③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강화, ④ 지자체 복지사업, 푸드플랜 및 식생활교육과의 연계방안 마련을 통한 정책 시너지 극대화, ⑤ 대국민 공감대 형성의 관점에서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⑥ 수혜자 지향적인 지원대상 품목 선정 또한 세심한 검토와 추진이 필요함.

16) 김상효 연구위원
17) 코로나19 발생한 이후 소득수준에 따른 식품비 지출액의 차이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수준이 낮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음. 2022년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형성된 해임.

2.9. 스마트농업 인프라 강화[18)]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 마련 및 종합계획 수립

- 농업 노동력 감소 등에 대응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2. 11. 8.)하여 국회 입법 절차를 남겨 놓은 상황이며,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통해 "현장과 민간중심,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 전환"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음('22. 10. 5.).

스마트농업 기반 관련 입법 및 정부 정책 방향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은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을 구체적으로 담고, 전문인력 양성과 스마트농업관리사(8조), 스마트농업 R&D(10조), 기자재 및 데이터 표준화(11조)와 더불어 데이터 플랫폼(11조) 및 거점단지의 지정(13조)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농식품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에서는 '스마트농업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① 데이터·AI 플랫폼 구축 ② R&D를 통한 핵심기술 격차 축소 ③ 민간 주도 협력 거버넌스 구축 ④ 스마트농업 관련 통계 생산·활용 등 관련 정책 추진을 제시하였음.

전문인력 양성, 효율적 R&D 및 민간 주도 운영 활성화 필요

- '스마트농업법'규정과 같이 체계적 공교육과 전문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은 스마트농업 기반과 발전의 핵심요소임. 이와 더불어 기존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운영 및 경영 관리 심화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테스트하고, 시험할 수 있는 실습·임대농장의 확대를 비롯하여 전문 컨설팅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기반구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 R&D를 효율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민간 기업의 참여와 유치를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함.

스마트농업의 핵심인 플랫폼 구축과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주체별 역할 강화

- 스마트농업의 관건은 후방산업, 생산 및 전방산업 등 다종·다분야의 관련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과 활용이 될 것임. 농업부문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부문이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들을 연계하며,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 타워'구축과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농업은 다양한 첨단 분야의 융복합이 중요함. 이를 위해 범부처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농업 전문 컨트롤 타워와 관련 워킹그룹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관련 정책, 경제·경영 및 관련 기술과 기자재 등의 발전과 확산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농업인, 산학연 및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18) 서대석 연구위원

2.10. 2030 NDC 감축로드맵 이행 조치 및 기후변화 적응 강화[19)]

2030 NDC 상향 조정 및 이상기후 가속화 전망

- 탄소중립 선언과 2030년 국제 메탄 감축 협약 가입으로 2030 '국가 자발적 감축기여(NDC)'는 당초 계획된 신기후체제하 감축 목표보다 훨씬 많은 586만 톤으로 상향 조정됨.
-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후의존성이 높은 농식품부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하여 농가경영 불안 우려됨.
- 2030 NDC 상향조정과 이상기후의 부정적 영향 확대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됨.

2030 NDC 감축로드맵 이행 조치 강화

- 2030 NDC 상향조정 및 온실가스 통계산정 방법 변경(1996 IPCC 지침에서 2006 지침으로)에 대응한 타당한 감축경로 설정
-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수용력 제고를 위해 경제적 지원 수단 마련: 비에너지 분야의 경우 공익·선택형 직불제 개선('기존 농업환경지불정책+α' 혹은 '탄소중립직불 신설')을 통해 지원하고, 에너지 분야의 경우 시설설치비의 자부담 비율을 축소하는 방향 모색
- 비용효과적인 감축수단의 발굴: 유기농업의 배출계수, 토양 탄소고정 기술, 전기·수소 농기계, 기후스마트농업 기술 등 기술 개발 로드맵 제시 및 감축수단의 경제성, 공·편익 분석 추진
- 경축순환농업을 통한 유기축산 확산,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정화처리를 위한 민원 해결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축산분야 감축방안 도출
- 2030 NDC 감축로드맵 이행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전환: 전문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 추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관련 데이터 통합 관리, 감축 기술 교육, 농업인의 실증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 ICT, IoT 기술을 활용한 비료 사용량,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량, 에너지사용량 등 온실가스 통계구축 방안과 온실가스 산정방식 고도화 방안 제시
- 디지털 기반 스마트농업(시설원예, 축산) 확산을 위한 생태계 강화와 법, 추진 체계, 조직 등 제도적 기반 구축

식량안보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시스템 구축 구체화

- 전문 기후변화 대응센터(데이터 제공 플랫폼)설립계획 구체화를 통해 농업인, 정책담당자, 전문가에게 맞춤형 적응 정보를 제공하고, 분산된 기관별 적응 관련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 및 유통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함.
- 조기경보시스템(2022년 현재 41개 시군 및 주산지에서 30개 품목에 대해 정보 제공)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기상재해 대응체계를 구축

19) 정학균 선임연구위원

2022년

제213호 2023년 10대 농정이슈(국승용 외)
제212호 2022 지역발전지수(RDI)(송미령, 성주인, 심재헌, 민경찬, 김민석, 손경민, 유서영, 이진)
제211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국승용, 김창호)
제210호 농촌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개선 과제 (김수린, 조승연, 김정승)
제209호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의 가공식품 물가 영향(김상효, 김종진, 주준형)
제208호 농산어촌 관계인구 현황과 의의(성주인, 송미령, 한이철, 정학성)
제207호 한·미 FTA 10년, 농식품 교역 변화(김경필, 이현근, 곽혜선, 명수환, 구혜민, 박서윤)
제206호 신 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 활성화(송미령, 성주인, 심재헌, 한이철, 권인혜)
제205호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곡물 시장 영향 분석(김종진, 김지연, 정대희, 박성진, 김범석, 윤성주)
제204호 WTO 농업협상 최근 논의 동향 및 전망(김상현, 정대희, 이두영)
제203호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정도채, 박혜진)
제202호 2022년 10대 농정이슈(이명기 외)

2021년

제201호 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 실태와 시사점(국승용, 서홍석, 서동주, 권상욱, 김경진)
제200호 2020년 귀농·귀촌 동향과 시사점(송미령, 성주인, 심재헌, 한이철, 민경찬)
제199호 탄소중립, 농촌 태양광의 이슈와 과제(김연중, 서대석, 허정회, 이정민)
제198호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당면과제(김상효, 이계임, 유기환)
제197호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의의와 시사점(송미령, 성주인, 심재헌, 서형주)
제196호 2021년 10대 농정이슈(이명기 외)

2020년

제195호 2020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우병준, 박혜진)
제194호 귀농·귀촌 인구이동 동향과 시사점-2019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중심으로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정도채, 한이철)
제193호 코로나19 사태와 북한의 식량수급 동향과 전망(최용호)
제192호 환경 변화를 반영한 2020년 농업부문 수정 전망(서홍석, 김충현, 김준호)
제191호 2020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전망(국승용, 이형우, 윤종열, 김종인, 한은수, 은종호, 서강철)
제190호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박미성, 박시현, 이용선)
제189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서홍석, 순병민, 김충현)
제188호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엄진영)
제187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 곡물 시장 영향 및 전망(박성진, 박지원, 강두현, 안정욱)
제186호 2020년 10대 농정이슈(이명기 외)

2019년

제185호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이정민, 우성휘, 이명기, 박혜진)
제184호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필요성과 도입 방안(김상효, 이계임, 임소영, 허성윤)
제183호 동남아 6개국(CLMVIP)의 쌀 산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방향(김종선, 이윤정, 조선미)
제182호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채광석, 김부영)
제181호 2019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전망(국승용, 이형우, 윤종열, 한은수, 김종인, 은종호)

제180호 최근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이형우, 한봉희, 우병준, 박기환)
제179호 2013~2017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유찬희, 서홍석, 김태후)
제178호 양봉산업의 위기와 시사점(이정민, 김용렬, 김창호, 우성휘)
제177호 2018년 국민들은 농업·농촌을 어떻게 생각하였나?(송성환, 박혜진, 김용렬)
제176호 2019년 10대 농정 이슈(정민국 등)
제175호 농식품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현황과 시사점(이정민, 김창호, 김용렬)

2018년
제174호 CPTPP 발효와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문한필, 조성주, 이수환, 염정완, 김경호)
제173호 2018년 미국의 농업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김상현, 임정빈)
제172호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의 영향과 전망(윤종열, 박지원, 신기석, 강두현)
제171호 MERCOSUR 농축산물 생산·교역 동향과 시사점(오새라, 조성주)
제170호 대체 축산물 개발 동향과 시사점(이정민, 김용렬)
제169호 2018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정학균, 성재훈, 이현정)
제168호 2018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전망(이형우, 허정회, 한은수, 김종인, 은종호, 박기환)
제167호 농업자원 관리를 위한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구축방안(성재훈, 조원주, 이현정)
제166호 농촌 주민의 교통서비스 이용 여건과 개선 과제(김용욱, 성주인, 민경찬)
제165호 미중 무역분쟁과 주요 농축산물(대두, 돼지고기) 수급 전망
(문한필, 전형진, 윤종열, 이형우, 박지원, 임채환, 한봉희)
제164호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채광석, 이현정, 손학기)
제163호 한·EU FTA 발효 7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송우진, 이현근, 명수환, 유주영)
제162호 한·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박수연, 한석호)
제161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송성환, 박혜진)
제160호 2018년 10대 농정 이슈(김병률, 이명기 등)

2017년
제159호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교역 동향(지성태, 남경수, 염정완, 김만이)
제158호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허장)
제157호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우병준, 임소영, 이두영, 이형용, 한보현)
제156호 2017년 김장 의향 및 김장채소 수급 전망(김성우, 최선우, 임효빈, 한은수, 신성철, 김창수, 노호영, 김원태)
제155호 2017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성재훈, 이혜진, 정학균)
제154호 신정부 쌀 산업 정책 방향(김태훈, 박동규, 김종진, 김종인, 윤종열, 조남욱, 채주호)
제153호 2017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출하 및 가격 전망(박미성, 노호영, 이형우, 김종인, 이상민, 황의식)
제151호 최근 귀농·귀촌 실태와 시사점(김정섭, 이정해)
제150호 한·EU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송우진, 이현근, 남경수, 김만이, 명수환)
제149호 소 사육 통계의 이력제 자료 대체와 시사점(이형우, 김진년, 서홍석, 김충현)
제148호 농산업의 청년 고용 창출 가능성 및 과제(마상진, 엄진영, 김경인)
제147호 한·아세안 FTA 발효 10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유정호, 유주영)
제146호 효과적인 산불관리를 위한 개선과제(정호근, 안현진, 이상민)
제145호 미래를 위한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
(이명기, 송미령, 유찬희, 국승용, 김정섭, 김홍상, 박준기 등)
제144호 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박수연 정민국)

제143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정책 개선 방향(지인배, 김현중, 김원태, 서강철)
제142호 2017년 10대 농정이슈(김병률, 이용선, 김연중 등)
제141호 7차 HPAI 발생 이후 가금산물 가격 동향과 전망(이형우, 정세미, 지선우, 김형진, 한봉희)

2016년
제140호 2016년 한·영연방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송우진, 이현근, 유정호, 한석호)
제13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138호 2016년 한·중, 한·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한석호)
제137호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박미성, 윤선희, 김라이)
제136호 쌀 수급 동향 및 안정 방안(김태훈, 조남욱, 김종인, 우병준)
제135호 2016년 가구의 김장 수요와 채소 공급 전망(김성우, 송성환, 노호영, 임효빈, 최선우, 한은수, 이형용, 노수정)
제134호 당류 저감 정책에 따른 과일산업의 대응과제(박미성, 신성철)
제133호 2016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림축산물의 소비·출하 및 가격 전망
(박미성, 이상민, 성명환, 우병준, 김태훈, 김성우, 장철수, 송미령)
제132호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제131호 2016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정학균, 이혜진, 김창길)
제130호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김현중, 국승용)
제129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제128호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제127호 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제126호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국승용, 최지현)
제125호 2016년 일본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김종인)
제124호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허 장, 이윤정)
제123호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정도채, 성주인, 심재헌)
제122호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정책 방향(김연중, 박영구)
제121호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제120호 2016년 10대 농정 이슈(송미령, 김홍상, 박준기 등)

2015년
제11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118호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파급 영향(우병준, 김형진)
제117호 2015년 김장철 채소류 수급 전망과 절임배추 소비특성 분석(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제116호 쌀, 김치, 삼계탕 대중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과 과제(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제115호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전략(정학균, 김창길)
제114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제113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따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제111호 김치의 한·중 검역협상 동향과 수출 확대방안(최병옥, 노호영)
제110호 주요 농림축산물의 2015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옥, 장철수, 최지현)
제109호 대한민국 성장의 대지, 농업·농촌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제108호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107호 최근 소 값 동향과 전망(이형우, 우병준)

KREI 농정포커스

감 수 박준기 부원장 061-820-2011 jkpark@krei.re.kr

내용문의 국승용 선임연구위원 061-820-2275 gouksy@krei.re.kr

집필진 담당 내용	집필진	전화번호	전자메일
2023년 농정 여건	국승용 김재현	061-820-2275 061-820-2053	gouksy@krei.re.kr mars7856@krei.re.kr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영농안정 대책 마련	서동주 이형용	061-820-2374 061-820-2338	tjsuh@krei.re.k lhy2813@krei.re.kr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과 달성 전략 수립	김종인	061-820-2360	jongin@krei.re.kr
다각적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한 직불제 확대·개편 추진	유찬희 김태훈	061-820-2022 061-820-2174	chrhew@krei.re.kr taehun@krei.re.kr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른 농촌 정책의 혁신	심재헌 한이철	061-820-2196 061-820-2304	jhsim@krei.re.kr yhan@krei.re.kr
IPEF 참여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마련	김상현 정대희	061-820-2280 061-820-2277	sanghyun@krei.re.kr dhchung@krei.re.kr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 진전	김성우 김동휘	061-820-2115 061-820-2246	swkim@krei.re.kr dkim11@krei.re.kr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공급 확대	엄진영	061-820-2255	jeom@krei.re.kr
취약계층 식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김상효	061-820-2218	skim@krei.re.kr
스마트농업 인프라 강화	서대석	061-820-2260	dssuh@krei.re.kr
2030 NDC 감축로드맵 이행 조치 및 기후변화 적응 강화	정학균	061-820-2248	hak8247@krei.re.kr

발간물문의 유정인 선임전문원 061-820-2282 edela@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213호

2023년 10대 농정이슈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2. 12.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